

2022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출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5. 01	[뉴스 17]비만 4년새 2배 이상으로...코로나·음식 등 영향 [뉴스리뷰] 2040년 총인구 5,019만명...총부양비 2배 증가 [뉴스워치] 국민 '2명당 1車' 시대	
김창숙	5. 08	[뉴스20] '검수완박 1차'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의장실 앞 총돌사태 [뉴스워치] 공약 실현 vs 집값 안정... 재건축 규제 완화 딜레마 [뉴스워치] 아직은 어색한 NO 마스크... "예외도 기억해야"	
김창숙	5. 15	[뉴스리뷰]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부동산 실책·국민분열 초래" [일요와이드] 이재명 "전국 과반승리 이끌 것"... 안철수 "새 정부 성공 초석 놓겠다"	
김홍태	5. 22	[뉴스프라임]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법정 다툼...쟁점은? [뉴스프라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99% 폭락...투자자 울상	
임윤주	5. 29	[뉴스현장]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여야, 인천서 출정식 [뉴스리뷰] 새 방역사령탑에 '감염병 전문가'...물러나는 'K-방역'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출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2 5/1(일)	임윤주	4월 19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 보도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작년 2021년 10월 기준 배달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42만 8천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0월에 비해 22%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배경으로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서비스 종사자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증가세도 함께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 역시 간략하게 정보를 전달해준 단신 뉴스였는데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 화면으로 일반적인 배달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보다는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 인용된 '2013년 통계 집계 대비 역대 최대'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배달원 수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혹은 2013년 대비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대비 22% 증가한 비율임을 언급한 것과는 달리, 자막으로 '1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는 문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배달원 수가 약 12% 증가, 2020년 대비 2021년 배달원 수	배달원수와 인구 통계와 관련된 단신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단신은 방송사들에 있어 생각보다 원고쓰기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40초 이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나운서가 단신 여러 편을 계속 읽어야 하는데다 단신이 너무 길어질 경우, 주의도가 떨어지고 내용파악이 어려워져 길게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의 단신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조금 더 긴 편에 속하는데, 어느 방송사도 보통 30초대에서 이뤄지는 단신에서 주제목 외에 리포트처럼 내용 진행에 따라 별도의 자막을 계속 교체해 쓰거나 관련 영상 외에 자세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상 '배달원' 관련 단신은 저희 기사제작시스템을 통해 추정된 길이는 38초, 인구 관련 단신은 35초이나 숫자가 많을 경우 실제 읽는 시간이 더 걸려 '배달원'의 경우 47초, '인구'는 41초에 달해 내용을 추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약 1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의 큰 증가세를 전달하기 위해 보도와 일치된 자막을 사용해 전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슷한 단신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월 14일 저녁 8시 <뉴스리뷰>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측한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인구전망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약 5천2백만 명이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20년 뒤인 2040년 약 5천만명으로, 약 165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소년과 노년 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도, 현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약 40명에서 약 8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총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향후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비단 65세 이상 고령인구만 2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1.5%에서 2040년에는 55.7%로 떨어지며,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중도 12.4%에서 8.9%로 감소합니다. 즉, 이러한 연령별 증감의 결과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보도에서는 유소년과 노년 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 기준으로 전달되었으나, 노년 부양비만 두고 보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15세부터 64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나이 범위를 함께 추가하여 언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	--

2022 5/8(일)	김창숙	<p>4월 30일 오후 4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됐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 표결에 부쳐지게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막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빚어져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쳐 국회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던 현상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입장하였고,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가 개의되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으로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161석에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1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7시 <토요와이드>에서는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 박탈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절차 문제를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고, 4월 28일 검사와 수사관 등 구성원들의 호소문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진 못했는데, 검찰은 5월 3일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신속히 현</p>	<p>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이상 유지해온 형사소송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내용이어서 보는 시각과 있는 위치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다보니 법조계 특히 검찰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과 전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취재하며 대응하겠습니다</p>
----------------	-----	---	---

2022 5/15(일)	김창숙	<p>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도 4월 27일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4월 29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혼란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자는 법조계 반응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은 4월 15일 발의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름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는데,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중대 사안이 의견 수렴이나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검찰, 경찰,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반응이 나올 때 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도하다 보니 나열식 보도가 많고, 입장문이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전달이 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등 사건의 추이를 전달하는 것도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지만,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갈등내용도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정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p>	<p>5월 8일 해당 기사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의 출마선언과 기자 간담회 내용을 전하는 보도이다보니 두 사람의 각오와 발언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전국 단위 선거이다보니 여권의 ‘안정론’과 야권의 ‘심판</p>
-----------------	-----	--	---

	<p>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의 활로를 여는 것이라며,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민생 실용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선 재차 강하게 응수하며 “누가 영뚱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부정부패라고 하는데, 계속 찍다 보면 자기 발등에 피가 나고 있을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행복순위는 해마다 떨어지고, 민주당이 장기집권한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몸을 던지겠다고, 성남시와 경기도,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놓고 “아무런 연구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윤 당선인이 자신의 출마에 대해 격려했고, 공천 방식에 대해선 모두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 시즌2로 치러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의 화제성이 높다보니 자꾸 둘을 대립 관계를 부각시키는 언론보도들이 눈에 띕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신성 공격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보도과정에서 자극적인 언어들 사용되는 경</p>	<p>론’ 같은 선거 구도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승부처로 삼거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충청권 단체장 선거에 집중된 측면도 있습니다. 유권자로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후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이러한 니즈를 충족 시키는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연합뉴스TV가 전국 단위 방송이다보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이슈를 발굴해 제시해 달라라는 주문에 공감하며,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p>
--	--	--

<p>2022 5/22(일)</p>	<p>김홍태</p>	<p>우가 있는데, 이런 보도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지방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공약 등에 대한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발언을 받아쓰는 보도들이 과도할 경우 선거 이슈가 후보자가 발언하는 이슈들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시민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p> <p>지난 13일 저녁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한국인이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루나’란 가상화폐가 최근 갑자기 99%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불안이 번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와 테라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출금을 중단시켰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를 상장폐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기에, 테라와 루나의 폭락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거품론부터 폰지사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던 유동성의 긴축이 발생하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에선 투매가 나타났는데요, 한번 불신이 싹트면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고 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끝없는 추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나는 전 세계 사용자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상장폐지되고 우리나라의 업비트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루나는 이전 스테이블 코인과 다르게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지만, 테라는 암호화</p>	<p>루나 사태 이래로 경제부뿐 아니라 사회부, 글로벌뉴스부에서 유관사실을 전하며 테라 사태의 진행과 위험성을 다룬 리포트,단신,영상구성과 전문가 출연이 약 30여 편에 이르며 그 위험성과 사기 및 수사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지적해주신 해당 리포트 역시 50조원의 자금 증발과 투자 피해자의 육성을 직접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2분 이내의 리포트 길이 성격상 한 리포트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고 당일은 거래 중지와 이로 인한 피해상황과 각국 거래소의 동향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리포트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

		<p>폐를 연동한 구조였습니다. 실물자산 담보 없이 자체 발행한 루나를 통해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층, 특히 젊은 층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기에 유동성 위험과 코인투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멘트는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p>	
<p>2022 5/29(일)</p>	<p>임윤주</p>	<p>지난 2년 간 팬데믹을 겪어오며 빼놓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에 방영된 <뉴스현장>내 뉴스메이커에서 질병관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은경 전 청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첫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초대 관리청장이었습니다. 초반 신속한 격리와 치료 전략, 정보 공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잘한 부분 외 비판받았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짧게 '정치 방역' 비판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전 청장과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보도되지 않고 해당 뉴스로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정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월 17일 오후 9시 <뉴스리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2대 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을 지내며 방역 전문 자문을 맡는 등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유행 초기 해외 확진자 유입이 늘어</p>	<p>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임식을 갖고 퇴진한 것을 계기로 <뉴스메이커>에서 정 전 청장을 다뤘습니다. 코너의 성격상 '뉴스 인물'로 다루다 보니 공과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인터뷰나 출연을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 보려고 했지만 사양하는 바람에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도 '과학 방역'에 초점을 맞춰 향후 행보를 주시하겠습니다.</p>

		<p>나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수장 경험이 적다는 점, 그리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만큼, '과학 방역'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장으로서의 취임사 내용을 요약 전달하거나, 그가 밝힌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장의 경우, 향후 직접적인 행보가 전달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보도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2. 5. 0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4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몇 년간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소식 중 하나가 바로 통계 수치입니다. 거의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전해 듣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주에도 통계 수치들을 활용한 뉴스들이 여러 개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보도되었는지, 그리고 통계 수치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1일 오후 5시 뉴스에서 보도된 우리나라 비만율 관련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는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비만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비만 환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령별로는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201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원인으로 심평원은 인스턴트, 배달 음식 섭취 증가와 운동 부족 심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결핍 환자 역시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만율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비만율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결국 2017년 대비 2배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자료화면 대신 지난 5년간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함께 보여주었다면, 전달력이 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비율이 약 1.5배 차이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당 연도의 비만율이 높게 증가한 것인데, 이 당시 비만율이 높게 증가한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신 뉴스의 한계임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시청자들이 해당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조금 더 보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배달원 수의 증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9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 보도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작년 2021년 10월 기준 배달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42만 8천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0월에 비해 22%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배경으로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서비스 종사자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증가세도 함께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 역시 간략하게 정보를 전달해준 단신 뉴스였는데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화면으로 일반적인 배달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보다는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에 인용된 '2013년 통계 집계 대비 역대 최대'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배달원 수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혹은 2013년 대비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대비 22% 증가한 비율임을 언급한 것과는 달리, 자막으로 '1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는 문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배달원 수가 약 12% 증가, 2020년 대비 2021년 배달원 수가 약 1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의 큰 증가세를 전달하기 위해 보도와 일치된 자막을 사용해 전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슷한 단신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월 14일 저녁 8시 <뉴스리뷰>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측한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인구전망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약 5천2백만 명이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20년 뒤인 2040년 약 5천만명으로, 약 16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소년과 노년 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도, 현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약 40명에서 약 8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총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향후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비단 65세 이상 고령인구만 2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1.5%에서 2040년에는 55.7%로 떨어지며,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중도 12.4%에서 8.9%로 감소합니다. 즉, 이러한 연령별 증감의 결과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보도에서는 유소년과 노년 부양비를 합친 총부양비 기준으로 전달되었으나, 노년 부양비만 두고 보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한편,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15세부터 64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나이 범위를 함께 추가하여 언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상회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0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는 학교 현장의 기대감과 학습 및 심리 결손 문제에 대해 보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일상회복을 통해 다시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및 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체험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학생 인터뷰를 통해 학업 성적도 온라인일 때보다 나아진 것 같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학습 결손과 사회성 회복 등은 큰 문제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는 통계청 통계 결과를 인용하여,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2021년 12월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감이 낮아진 것 같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질문에 6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손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상황에 맞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교과 보충과 기초학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심리 상담과 학생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통계 결과를 사용하여, 기사가 전달하고자 한 의미와 정보가 잘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치 언급 시, 적절한 그래프의 활용으로 전달력 역시 높았습니다. 통계청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은 성별, 지역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도에서 언급한 개별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함께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부분에서, 학생 1,01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 결과를 그래프를 중심으로 정리한 4월 13일 저녁 6시 뉴스워치 내 그래픽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결과를 인용하여, 현재 국내 자동차 보유 현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해오다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천5백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구 대비로 살펴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원산지별로는 국산차가 누적 점유율 88%, 수입차가 12%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점유율 10% 대를 진입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환경차의 증가세도 2018년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에 걸맞게 많은 수의 수치들을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 전달하여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경우, 총 등록대수 외에도, 친환경차 수가 전체 등록대수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그래프에 함께 표기되어 정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그래픽뉴스 외에도 통계 수치를 활용할 때,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 전달력을 높이고,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2. 5. 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4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4월 3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8시 뉴스>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당시의 현장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4월 30일 오후 4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됐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 표결에 부쳐지게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막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빚어져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쳐 국회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등 이수라장이었던 현장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입장하였고,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가 개회되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으로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161석에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17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7시 <토요와이드>에서는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능 박탈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절차 문제를 강조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안 발의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고, 4월 28일 검사와 수사관 등 구성원들의 호소문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진 못했는데, 검찰은 5월 3일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도 4월 27일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본회의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4월 29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혼란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자는 법조계 반응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은 4월 15일 발의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름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는데,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중대 사안이 의견 수렴이나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검찰, 경찰,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반응이 나올 때 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도하다 보니 니열식 보도가 많고, 입장문이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전달이 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 등 사건의 추이를 전달하는 것도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지만,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갈등내용도 시청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정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론에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29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들쭉거리리는 집값 탓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 정비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약 후퇴 우려가 불거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

해, 국민의힘과의 첫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추진을 다시 약속한 것으로, 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뒤, 말 바꾸기란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등 규제를 풀고, 노후 단지를 재정비해 추가 공급에 나선다는 게 인수위의 원래 계획이지만 서울만 해도 더 오래된 단지가 넘쳐나는데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재건축이 일시에 몰리면 매매에 전월세까지 집값이 들쭉날쭉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급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지는 취지지만 단기 집값 상승이 문제라면서 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공약 실현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28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당일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책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손실보상금 규모는 구체화하지 않은 채 100% 손실보상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피해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 알 수 없고, 손실보상률과 보상하한액도 올리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처당지급에 상한이 600만원이라면 현 정부안보다 퇴행된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당선 후 변경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한 만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입니다. 연합뉴스TV가 공약 실현과 관련된 뉴스를 전달할 때는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공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책 변경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약은 이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약이 실현 단계에서 변경된다는 것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 축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 후에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것인지를 선거과정에서 꼼꼼히 짚어주는 보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2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시민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야외에서는 노마스크가 가능해졌지만, 마스크 착용이 익숙해진 시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착용이 더 편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해 대중교통 이용이나 실내로의 이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잊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외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에서는 밀집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써야 하는 반면,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착용이 권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언제 벗고,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기자는 실외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되도록 마스크를 써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스카프나 망사형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고, 밀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노마스크가 허용되는지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앞의 보도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거나 권장되는

상황 등을 짚어주었는데, 어디까지가 실외인지와 같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을 감지해서 정보를 제공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2. 5. 1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4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며 국정 전반의 변화를 예고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임기 5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민통합을 당부했습니다. 오후 6시쯤 문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를 떠나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마감됐는데, 5월 9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구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진지하게 국정에 임한 문 대통령의 노고를 잊지 못한다”며, 다음 정부가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은 고쳐갈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에 수고가 많았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분열 등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과정에는 빛과 그늘이 공존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는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의 논평과 “임기 말 40%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40%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을 편가르기한 것”이라고 꼬집은 양금희 원내대변인의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정의당도 선거제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개혁 성과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얼미터가 5월 첫주 국민 2,014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 포인트 낮아진 41.4%를 기록했고, 부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1.4% 포인트 오른 55%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5년간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평균치는 51.9%, 부정 평가 평균치는 43.5%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5월 9일 오전 6시 <출발620>에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국정, 모든 부문에서 굵직굵직한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대북정책을 짚었는데, 취임 전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포용적 대북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한미 연합훈련도 복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외교 기조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촉매로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등 한미동맹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가 부활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제 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늘려온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문재인 정부가 묶어놓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80%까지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러 차례 발동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 지적한 공수처의 사건이첩 권한도 없앨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는 반대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전 정부 뒤집기 드라이브엔 국정동력이 적잖이 소모될 전망이지만 압도적 여소야대로 내각 구성도 힘겨운데다, 취임 전 지지도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0시를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공식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날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다수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취임식 관련 내용과 비전과 정책기조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신규정권의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부의 계획 등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짚어준 보도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어떤 정권 하에서든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가 새로운 정부 하에서도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이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소통, 국민의 뜻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매번 정부가 취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연합뉴스TV가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론이 정책에 잘 반영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8일 오후 5시 <일요일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5월 8일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자신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지만,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의 활로를 여는 것이라며,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번 지방선거에는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민생 실용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의혹 등에 대선 재차 강하게 응수하며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부정파라고 하는데, 계속 찍다 보면 자기 발등에 피가 나고 있을 것”이라며 “자칭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행복순위는 해마다 떨어지고, 민주당이 장기집권한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몸을 던지겠다고, 성남시와 경기도,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를 놓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윤 당선인이 자신의 출마에 대해 격려했고, 공천 방식에 대해선 모두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 시즌2로 치러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의 화제성이 높다니 자꾸 돌을 대립관계를 부각시키는 언론보도들이 눈에 띕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신성 공격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보도과정에서 자극적인 언어들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도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지방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그 외 지역들의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나 공약 등에 대한 정보를 언론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발언을 받아쓰는 보도들이 과도할 경우 선거이슈가 후보자가 발언하는 이슈들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시민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5월 8일 <오후 11시 뉴스>에서는 정부와 통신 3사의 논의 중인 손해배상 약관 개정이 6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기사는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 사태가 터지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라는, 20년 전 만들어진 배상기준의 현실화 요구가 쏟아졌고, 정부

와 통신 3사는 부랴부랴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 무소식이 라며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피해 시간을 줄이고, 배상은 늘리는 쪽으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논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약관 개정이 늦어지는 데는 약관이 신고제라는 점도 한 몫 한다는 점을 짚었는데,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간이 반년 넘게 흐르다보니 정부도 통신사도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는 28GHz(기가헤르츠) 망구축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짚었습니다. 최근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행률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으로 정한 10%를 겨우 넘었으며,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구축도 이 수준인데, 정부는 6G 표준 선점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장에 사태가 터지고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여론과 언론을 인식해 정부나 기업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고, 언론도 지나간 사건을 다시 주목해서 진행사항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도는 정부와 통신 3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약관 개정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을 잘 지적한 보도였고, 약속 이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잘 작동된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2. 5. 22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54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고등검사장들이 거들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우선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루나'란 가상화폐가 최근 갑자기 99% 폭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라이브투데이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전 정부에서 집단 사표를 냈던 고등검사장들이 거들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조재연 부산고검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는데, 박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달 22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총장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검찰 업무 공백을 우려해 반려했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뉴스리뷰에서는 검사 출신인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 임명에 대하여 보도했는데, 신임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면서, 두 부처는 각각 법제업무와 법무행정 소관이며, '검수완박' 후속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에 이어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까지 동기라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과 대통령 장모 소송도 맡은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전했는데,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점에서 '검수완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보도했습니다. 법학박사인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보기도문 학구파로, 검찰제도와 검찰청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로도 꼽히는데,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 지난 20년간 추진된 사법개혁 논의기구에 검찰 대표로 빠짐없이 참여한 '산증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는데, 검찰 역사상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에 이어 법무부 첫 여성 차관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됐는데, 윤 대통령과 1997년 성남지청에서 만난 '25년 인연'이자, 한동훈 후보자와 함께 중앙지검 차장으로 일했으며 법무부에서도 두 차례 근무해 정책업무에 밝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 법무부의 중심 정책기조인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전문가' 법제처장과 정책업무에 밝은 첫 여성 법무차관은 '윤석열 인맥'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후속 입법과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검찰수사권 박탈 법안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4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안 시행 이후엔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현재 맡고있는 주요 사건들을 4개월내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찰인사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검장들의 사표와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의 임명은 법

무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매우 중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수사실무를 담당했던 검찰의 수뇌부들이 줄 사표를 내면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국은 그 영향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내용대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공정과 상식은 국민을 기준으로 들이대는 잣대이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제 수사실무를 담당했던 검찰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이 법안이 어떠한 불편함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간단한 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재 공식인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들이 거둬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의 인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검찰인사의 뉴스에서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뉴스프라이머에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일차적으로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도심 집회를 예고한 한 시민단체, 경찰은 행진하는 길이 집무실 100m 내에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는데,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보고, 시민단체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는데, 경찰은 즉시항고를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 재판부와 본안사건 재판부가 동일하다고 하면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법률 해석을 하게 되어 결론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관저와 집무실을 분류해서 보고 있다는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 조문 체계를 보면 청사와 저택을 따로 나열해 놔다면서, 그런데 저택에 나열된 대통령에 대해서만 집무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지 않는 법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관저로 규정한 걸 예시라고 보면서,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100m 이내의 시위 금지 규정을 관저뿐만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집회금지 장소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된 집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보도에서는 우선 법원판결의 취지와 함께 법조문을 간단하게 집고 갈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본관 건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집무실도 집회가 금지되는 효과를 같이 누렸던 것인데, 현재 예전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위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

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모였는데, 용산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을 시작해 시위 차량과 참가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났습니다. 경찰은 펜스를 설치해 시위대가 지나는 차로를 통제했으며,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정문 앞에서 행진을 멈추고, 15분 정도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판단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현행 조문의 해석을 통한 해결 외에 법개정의 논의를 짚은 부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7시 뉴스프라이머에서는 한국인이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루나'란 가상화폐가 최근 갑자기 99%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후퇴 우려가 겹치며 가상화폐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한국인이 만든 코인으로 루나와 테라는 한때 시가총액 기준 세계 가상화폐 상위 10위권에 들었지만, 지금은 99% 이상 폭락하여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는 잠시 거래를 멈췄다가 재개했지만, 날아간 시가총액이 무려 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루나 외에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12일 하루 증발한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란 분석도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통장 잔고 확인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 회사 권도형 대표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감독과 규제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루나 사태는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착시현상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진흥과 규제가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안이 번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와 테라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출금을 중단시켰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루나를 상장폐지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기에, 테라와 루나의 폭락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거품론부터 폰지사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던 유동성의 긴축이 발생하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에선 투매가 나타났는데, 한번 불신이 싹트면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고 이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끝없는 추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나는 전 세계 사용자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업비트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루나는 이전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지만, 테라는 암호화폐를 연동한 구조였습니다. 실물자산 담보 없이 자체 발행한 루나를 통해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층, 특히 젊은 층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기에 유동성 위험과 코인투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멘트는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2. 5. 2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4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거주해있는 시, 도의 일

곤들을 뽑으실텐데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지 3개월만에 이루어지는 선거로, 현 대통령의 공약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역에서는 더 해당 이슈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민영화' 관련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 5월 19일 2시에 방송된 뉴스현장 내 <정치플러스>에서는 양당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치플러스에서는 장예찬 전대통령직 인수위 청소년소통TF 단장과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출연해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관련, 5.18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후보들의 다양한 행보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소식도 뒤따랐습니다. 앵커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 철도 등과 관련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설주완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지분의 40%를 민간 이전, 즉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40%의 비율을 민영화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회사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전의 경영이 부실한 일부 부분에 대해 민간 매각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여, 전력 역시 민영화로 호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쟁이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예찬 단장은, 일부 민영화 아이디어는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 역할로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에 기록된 내용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당에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선동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전기나 철도의 경우에는 민영화 가능성이 절대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입법을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명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예찬 전 단장은 대선을 치르고 3개월, 취임한 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으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슈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발언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해당 뉴스는 현재 여아가 해당 이슈에 취하고 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 비단 과거 저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 아닌데요,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 최근 주요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강조했다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임명된 이후 있었던 발언으로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설주완 변호사의 발언 역시,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근거가 매우 명확하기보다는 추측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다소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전문가의 발언에 있어 추가적인 질문이나 덧붙일 의견이 진행되지 않은 채 각 발언만 전달되고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인 5월 19일 저녁 8시 <뉴스 프라임>에서는 양당의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에서의 아쉬움들이 다소

해소되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 김유정 전 의원이 관련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사실상 과거 의사를 유지한 것이며 이것이 민영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신이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응답한 내용인만큼 개인의 소신이라고만은 치부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가 근거 없는 이슈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경진 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없으며, 취임한 이후에도 직접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거 저서에 작성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상 현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은 민영화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이 현재의 대통령인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만 전달된 것이 아닌, 추가 의견이나 반박 의견 등이 이어져 각 의견을 이해하고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의견을 전달하는 마지막 부분에 다소 감정적인 언사가 포함되었기는 하나, 해당 문제가 현재를 포함하여 향후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우려를 전달한 바와 같이, 비서실장의 발언 외에는 논의할 만큼 드러난 내용들이 없다는 점에서 양당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시청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투표해야 하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개월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팬데믹을 겪어오며 빼놓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에 방영된 <뉴스현장>내 뉴스메이커에서 질병관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은경 전 청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지난 2년 4개월간에 대해 전했습니다. 먼저 2020년 1월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코로나가 심각해 질수록 흰머리가 늘어났음을 한 눈에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정치방역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는 마지막 기념 촬영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대신 '덕분에' 캠페인 포즈를 취해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정은경 전 청장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난 2년 4개월 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화한 흰머리도, 짧게 자른 머리도 회자가 되었을텐데요. 그것이 방역에 헌신적으로 매진함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나, 그보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은경 전 청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를 거치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만큼 중요

한 자리를 맡았는데요. 첫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이자, 초대 관리청장이었습니다. 초반 신속한 격리와 치료 전략, 정보 공개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잘한 부분 외 비판받았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짧게 '정치 방역' 비판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정은경 전 청장과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보도되지 않고 해당 뉴스로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정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5월 17일 오후 9시 <뉴스리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2대 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을 지내며 방역 전문 자문을 맡는 등 감염병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유행 초기 해외 확진자 유입이 늘어나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수장 경험이 적다는 점, 그리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만큼, '과학 방역'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장으로서의 취임사 내용을 요약 전달하거나, 그가 밝힌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장의 경우, 향후 직접적인 행보가 전달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보도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5월 1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5월 8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5월 15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5월 22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5월 29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